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6년 제 06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7개월 남았는데”...체전 준비 실태 ‘도마 위’

제민일보 고기욱 기자

02

KARA 상벌 및 분쟁 심의위 결정이 남긴 문제?

오토레이싱 김태종 기자

03

대한축구협회, '말 많고 탈 많은' 심판 문제 공개 논의...4일 '심판 발전 공청회' 진행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

04

스포츠윤리센터, ‘출산 문제’ 고승범 사태 조사 착수... ‘선수 보호조치 無’ ...

스포츠동아 남장현 기자

05

세종시의회 "엘리트 떠난다...체육영재학교 유치 협력"

뉴시스 송승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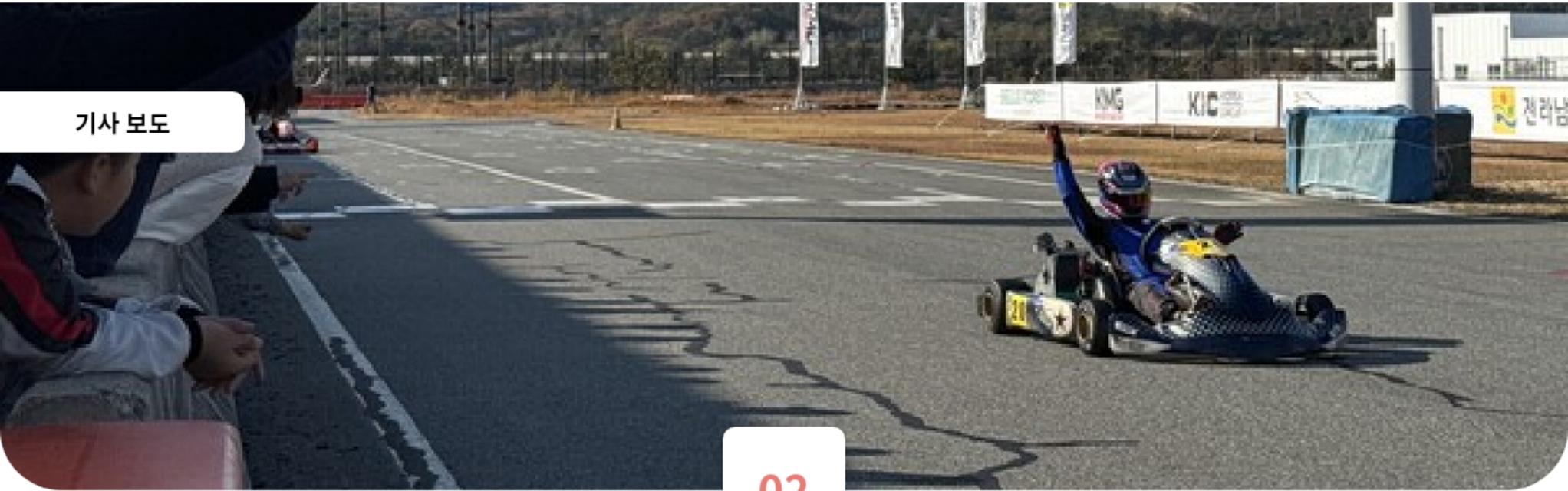
“7개월 남았는데”...체전 준비 실태 ‘도마 위’

제민일보 고기욱 기자

2026.02.09.17:18

사진=제민일보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와 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회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열린 제4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체육 관련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 체육의 컨트롤 타워가 너무 자주 바뀐다”며 “6개월에 한 번씩 단장, 과장, 팀장도 여러 번 바뀌면 성공적으로 체전을 치를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업무 파악하다 보면 시간 다 간다”며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바뀌었다.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시설 인프라 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준공이 원래 계획상은 10월로 돼 있다”며 “10월이면 장애인체전은 9월, 전국체전은 10월인데 사용이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00억원이나 투자하는 체육관인데 체전에 한 번도 쓸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팀장급 이상 다 바뀌어 중앙 부처와 협력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공기도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 뭘 믿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의 책임성 문제를 거론했다. 원 의원은 “핵심 부서 인사가 반복되면 업무가 초기화되고 추진 이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사후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체전 조직을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하는 상설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행정 연속성이 무너지면 제주 행정의 무능이라든지 혼선을 전국에 중계하는 행사가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인사 이동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에 1단 1과 4팀 20명으로 기구가 확대됐고, 최선의 준비를 다해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인력 보강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KARA 상벌 및 분쟁 심의위 결정이 남긴 문제?

오토레이싱 김태종 기자

2026.02.05 17:47

사진=K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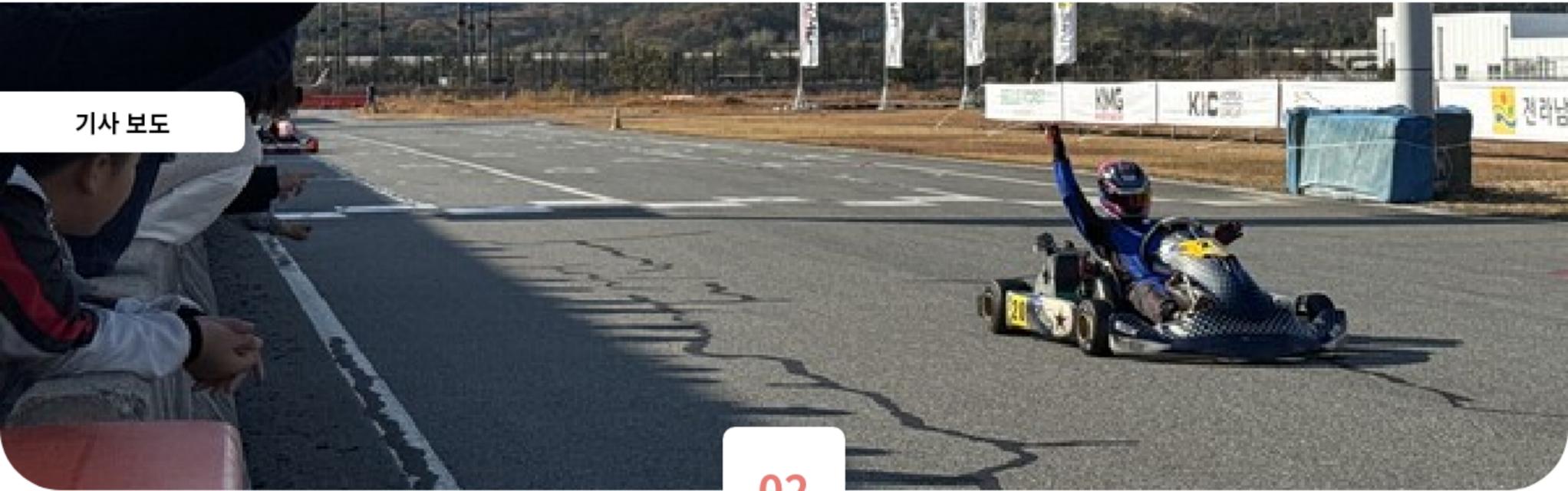
스포츠 징계 절차에서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로 증명된다.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판단 이후에 논의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어떤 절차 위에서 내려졌는지는 그보다 앞선 문제다. 이는 심의 결과가 옳았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결정을 당사자와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조건이기 때문이다.

징계·분쟁 심의 기구에서 이해충돌은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편향으로 보일 가능성만으로도 회피 사유가 성립한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는 위원의 판단 능력이나 도덕성을 의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결정 자체가 외부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서다.

국내 주요 체육단체와 프로스포츠 리그 다수는 이러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경우 해당 위원은 자발적 회피 또는 제척(특정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인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는 제도가 아니라 절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국제 스포츠 기구 역시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 IOC와 각 종목 국제연맹은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심의위원이 회피 없이 징계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고, 그 참여 없이는 결론이 성립하기 어려웠다는 구조는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이 문제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이나 판단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의 차원이다.



02

법조계와 스포츠 행정 전문가들 역시 스포츠 부문 징계 절차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를 결과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검색을 통해서도 “징계 절차는 사실상 준사법적 판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공정했는지보다 외부에서 공정하다고 인식될 수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며 “이해충돌이 사전에 차단되지 않으면 어떤 결론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징계가 개인의 지위, 자격,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절차적 흠결이 결과 전체를 흐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징계가 경미하든 중하든,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순간 그 결정은 수용력을 잃게 된다.

결국 ‘회피와 제척 없는 징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규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스포츠 단체가 징계를 통해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징계는 질서를 세우기보다 갈등을 남기고, 규율을 강화하기보다 불신을 축적한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문제는 명확하다. 징계의 결론보다 먼저 점검돼야 할 것은 그 결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과연 제도적으로 안전했는가라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대한축구협회, '말 많고 탈 많은' 심판 문제 공개 논의...4일 '심판 발전 공청회' 진행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

2026.02.03.21:40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KFA)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심판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다. KFA는 4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스타디움 1층 대강당에서 'KFA 오픈 그라운드(Open Ground)'를 론칭한다.

이는 한국 축구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발표회다. KFA의 다양한 사업 및 이슈와 관련한 사안들을 축구가족을 포함한 각 이해관계자에게 소개하고, 정책 결정도 함께 해나가는 '열린 논의의 장'이라는 의미다. 오픈 그라운드를 통해 축구계 전체가 한국 축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공식 행사는 심판 발전 공청회다. 심판 역량 강화와 교육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심판 배정 및 평가 시스템 개선, 국제 심판 육성 방안 등 심판 제도 전반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심판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구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K리그는 지난해 심판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제대로 해소연할 곳도 없었다. 심판 관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KFA로 이관된 뒤 소통 창구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연달아 오심이 발생하며 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2026시즌, '월드컵의 해'에 KFA는 심판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다. 실제로 이번 공청회는 대외 공개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패널토론, 지정토론, 자유 질의응답을 병행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다양한 리그에서 활약하는 심판은 물론 KFA, 프로연맹 관계자 등이 함께한다.

KFA는 "이번 심판 발전 공청회를 시작으로 'KFA 오픈 그라운드'를 통해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 개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 축구의 미래 비전과 건강한 운영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04

스포츠윤리센터, '출산 문제' 고승범 사태 조사 착수... '선수 보호조치 無' 울산 구단도 조사 대상→'심적 고통' 고승범 부부 정신과 진료

스포츠동아 남장현 기자

2026-02-06 00:01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울산HD 고승범(32)의 '출산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축구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고승범이 울산 고위 관계자와 구단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해 9월 A매치 휴식기를 맞아 강원도 속초서 진행된 단기 전지훈련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제왕절개를 통한 둘째 아이 출산에 맞춰 고승범은 7월에 가족 돌봄을 위해 출산 휴가를 받기로 했는데 묵살당했다.

오히려 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장모가 딸 가진 죄로 (돌봄에) 나서야 한다. 첫 손주를 책임지는 게 맞다. 금전적 보상을 하라. 하루 100만 원씩 드리면 효자소리를 들을 것이다”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다. 또 구단 내 누군가는 “제왕절개는 하루이틀이면 낫고 걷는다”는 막말을 했다. 결국 줄어든 휴가로 왕복 10시간 이상 운전하며 가족을 돌보고 훈련에 참여했지만 이때도 고승범은 ‘고액 연봉자이니 감수하라’는 식의 모멸적 처사를 받았다고 여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신을 팬으로 칭한 제3자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부 검토를 거쳐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실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피해자(고승범 측) 사실확인이 이뤄졌고, 다음주 대면 조사가 예정됐다.

울산 구단도 조사 대상이다. 고승범은 구단으로부터 사과는커녕,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고 여긴다.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방관한 이들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후에도 강등 위기의 팀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정당한 권리(이적) 요청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인 모습에 더 힘들어한다.



04

울산은 1월 초 고승범을 합의된 몸값에 이적시키려다 입장을 바꿔 아랍에미리트(UAE) 알아인 동계훈련에 데려갔고, 현재는 ‘전력 외’로 재분류한 뒤 트레이드 이적을 시도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 고승범을 당혹스럽게 한다. 이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선수 가족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 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2020년 설립된 기관이다. 선제적 예방 사업은 물론 징계 권한도 가졌다. 직장 내 폭언과 괴롭힘, 갑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맞물린 터라 징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세종시의회 "엘리트 떠난다...체육영재학교 유치 협력"

뉴시스 송승화 기자

026.02.05.17:05:22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시청·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과 시청 체육진흥과, 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문체부 기본연구에서 세종시가 주요 검토 지역으로 포함됐음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변수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 유소년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한다"며 "영재학교 유치뿐 아니라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인프라 구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특화 종목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교육청이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세심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국회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세종연구원의 추진 방안 연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다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 연구에서 긍정적 검토가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족으로 용역비를 반납한 점은 아쉬웠다"며 "타 지자체와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5

세종시 체육진흥과와 교육청은 자체 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운영,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가결된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취지를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